정부, 무허가 中 어선 직접 몰수·폐선 추진

해경 해체에 불법 조업 기승 우려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 전단 운영

정부는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어선을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중 양측 모두에서 고기잡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배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배를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중국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12일 3천톤급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중국의 불법어선 단속에 시범운영한 결과 10척의 어선을 검거하고 2000여 척을 퇴거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국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뿐 아니라, 단속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쓰이던 낡은 경비함정과 고속단정을 새것으로 바꾸고 단속작업에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획득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 인식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협의해 양국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를 신설, 양국 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양경찰국 간 양해각서(MOU)를 내년 중 체결해 상대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10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로 연기됐던 한·중 공동순시도 연내에 다시 추진된다.

/연합뉴스

北 "전쟁 억제력 강화"

UN 인권결의안 강력 반발

북한은 20일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것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북 인권결의안 환영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사무국·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결의안 환영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갬코' 진실규명 위원장에 홍인화 … 공직사회 긴장

〈전 광주시의원〉

관련자 책임 주장 강경파

광주시 공무원 조사 관심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한·미 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 사기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에 홍인화 전 광주시의원이 선출되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 전 시의원은 갬코 관련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강력히 주장해온데다, 시민위원 대부분도 그동안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을 요청한 강경파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민운동가, 변호사, 언론인 등 12명으로 시민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열고 갬코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백서 발간,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호선(互選) 방식으로 홍인화 전 광주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위원회의 명칭을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로 정했다. 월 2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도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당시 갬코 담당 공무원 등 사기사건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 청구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만큼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홍 위원장은 시의원 시절 갬코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해 온 강성파이며, 시민위원에 이름을 올린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과 강경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부장 등도 그동안 갬코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당시 갬코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는 데도, 관련 책임은커녕 승진까지 한 뒤 핵심 보직에서 근무 중인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민위원회가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권한 등이 없는데다, 자칫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갬코 관련자 중 민선 6기들어 승진과 함께 핵심 보직까지 맡고 있는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사는커녕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완 관련, 이연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은 "갬코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포함해 누구든지 잘못이 있다면 인사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갬코 사건은 민선 5기 때 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등 모두 106억원을 날린 국제 사건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대통령 초대받은 세계적 셰프는?

가니에르·로카 등 5명

한식 세계화 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5명의 세계적 셰프(요리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자리는 한국의 장(醬)과 발효음식 등 한식에 대해 세계적인 셰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음식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물론 한식이 세계와 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초청을 받은 5명의 세계적 요리사는 피에르 가니에르, 호안 로카, 르네 레드제피 등이다. 또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안정현, 임정식 셰프도 참석했다.

우선, 피에르 가니에르는 '요리계의 피카소', '식탁의 시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프랑스 요리의 지존으로 추앙받는 세계적 명성의 셰프다.

호안 로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보물로 통한다. 호안 로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내세우는 요리 철학을 내세워 경의에 가까운 찬사를 받는 셰프다.

덴마크의 세계적 요리사 르네 레드제피(Redzepi)는 덴마크의 레스토랑 노마(Noma)의 창업자다. 그의 레스토랑 노마(Noma)는 영국 요리 잡지 '레스토랑'이 주관하는 '2014 세계 최고 레스토랑 50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임정식씨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북 '자갓(ZAGAT)'과 미슐랭 그린가이드(여행가이드) 등에 이름을 올리며 명성을 떨친 '정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안정현씨는 전통요리·혼례음식 연구가다. 지난 2009년 5월 한·아세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위한 오찬을 만들었다.

메뉴는 피에르 가니에르가 직접 만든 프랑스식 코스요리와 안정현씨가 별도로 준비한 송이된장 소스 전복구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체납액 정리율 31% 그친 전남도

서울 38기동대팀 벤치마킹 나선다

고액 체납자 거주지 진입

직접 징수방식 도입 방침

전남도가 좀처럼 줄지 않는 체납액 해결을 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시 38기동대팀의 체납액 징수 방식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합동체납 징수기동반을 신설하고,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로 진입해 직접 징수하는 강력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율은 96%에 이르고 있으나 체납액 정리율은 그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3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 공무원 33명으로 징수기동반을 구성하고, 서울시 38기동대팀과 같이 거주지에 직접 들어가 밀린 세금을 받고, 재산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남도 각 시·군 담당공무원들은 고액 체납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세금 납부를 권유하는데 그쳤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은 부도 또는 도산으로 인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일반적인 수준보다 호화롭게 살고 있다"며 "앞으로 소유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와 각 시·군은 본격적인 징수 기간을 앞두고 19·20일 연찬회를 열어 서울시 38기동대팀 팀장급 직원들을 초빙, 징수 노하우를 전수받고, 지자치별로 우수 징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군 지방세 징수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대주주 단기대여금 압류' 라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선보인 순천시 직원 문병태씨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여수시 직원 여상호씨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합동체납 징수기동반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정 연찬회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체납액 징수기법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